

전북인권사무소 유치 '한 뜻'

전북 인권위원회 "도민 불편 해소 위해 추진·도민과 함께 협력할 것"

전북도인권위원회가 도내에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뜻을 모았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도민 인권상담과 권리구제의 신속한 해결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지역 출신 정치인, 관련 중앙부처, 시민단체 및 도민과 함께 협력해 전북인권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별 상담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2019년까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북의 상담 신청인은 약 4,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나 많은 수치로, 도내 인

권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북도는 인구 대비 높은 노인 인구와 등록 장애인 수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상존해 인권상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위한 인권상담 및 조사체계 마련과 치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영남권에는 부산, 대구 2곳에 있는 반면, 호남권에는 광주에만 1곳이 있어 지역간 형평성 불균형으로 인해 인권단체로부터 지역 소외론이 대두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도내 인권사무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침해 피해 민원인의 대다수가 대면 상담과 직접 진정 제출 및 구체

적인 해결방안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인권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왕복 3시간과 상담시간을 포함하면 하루가 소요되는 불편함과 원거리 상담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등으로 상담·진정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할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비밀유지 및 공정한 조사 등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구에서 사건조사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독립적인 지역 인권사무소 설치에 꼭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북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해 2017년 4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전북지역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

하며 힘을 보탤다.

이와 함께, 전북시민사회단체의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기자회견, 전북도인권위원회의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의결 및 전북도회의의 '전북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한 지역 인권 증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 등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어, 정영선 전북도인권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염원하는 전북도 도민들의 뜻을 전달했다.

정영선 전북도 인권위원장은 "도민들의 인권 침해상담 및 권리구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건의를 추진하고, 지역출신 정치인과 관련 기관 및 중앙부처, 시민 단체 등 도민과 함께 전북인권사무소 유치를 위해 긴밀한 협력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소상공인정책 위상 강화해야'

전북연구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따른 정책 필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소상공인정책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는 소상공인을 성장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정립 및 정책의 독자성 확보,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전북연구원(김선기 원장)은 지난 5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 소상공인정책 위상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북도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소상공인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에 따른 소

상공인정책 대응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북도 소상공인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정책 추진 조직 격상(팀 단위→과 단위) ▲소상공인실태조사 정례화 ▲소상공인정책 심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둘째, 소상공인의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소통 협의체 운영 ▲소상공인정책 모니터링단 구성을 주문했다.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김수은 연구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종합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의 독자성 인정 및 일관성·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넘어 경제정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공공의료대 설립 챌린지 동참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이 8일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한 '남원지역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설립 챌린지'에 동참했다.

강동화 의장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라는 위기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보건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다이상 정치 화쟁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의회 소식지 발간

남원시의회가 의정활동을 담은 소식지 제42호 남원의정을 발간했다.

남원의정에는 제8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상임위원들의 의정활동 포부가 담겨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이 사진으로 담겨 있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남원시의회 편집위원회(손준영 위원, 김정현 위원, 양해석 위원, 노영숙 위원)는 "작년과 다르지 않게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남원의정이 잡시의 여유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수보회의의 모두발언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도민의 숙원"

민주 전북도당, 논평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180만 도민의 숙원이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난 지 1년의 세월이 지났다"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서둘러야 한다"며 "남

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나 신규 의대설립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법안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이 이미 발의했고, 지난해 8월 당정 협의를 거쳐 남원시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 설립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 대한의사회(의협)의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2020년 9월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를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백신이 도입돼도 연말까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유행은 예측이 힘들 것이기에 조금 완화된 시기에 국립의전원 설립은 시급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최근 국립의전원 설립 시급성을 요구하는 챌린지가 확대되고 있다.

전북도당 이미션 여성대변인은 "공공의료 강화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앞으로의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립의전원 설립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공공의료와 필수요료를 담당할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이익집단인 의사협회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이용자인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당원과 함께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보험 소비자 고지의무 완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건강 정보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4일 '보험소비자들의 고지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과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과 금융분쟁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2016년 1,331건이던 민원이 2020년 1,646건으로 약 23% 증가했으며, 조정신청은 2016년 949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 1만 5,424건에서 2019년 2만3,450건으로 52% 증가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만 1만3,503건에 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보험 가입 후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

위암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질문한 것만으로는 A씨에게 충분히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도 현행법은 보험자에 비해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험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소비자가 여러 보험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시 서면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소비자는 서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하게 하면서, 보험회사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호상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